방사능 오염도 측정기 한 대 없는 부끄러운 '수산 전남'

수입식품 방사능 측정 어떻게

감마핵종분석기 인력·장비 없어 식약청에 의뢰

광주는 휴대용 측정기 1대로 월 100여건 조사

식품 방사능 검사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체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문제다.

또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비롯한 모든 식품에 얼마만큼의 방사능이 있는지 여부도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일선 지자체의 관련 장비 마련과 전담팀 구성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방사능 검사 어떻게=정부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범위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슘 기준 370베크렐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 100베크렐로 적용한다.

현재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수입 전 식약청에서 검사를 하고, 국산이나 국내 유통 식품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감마핵종분석기 등 전문 분석 장비가 없는 일선 지자체 등이 방사능 검사 의뢰를 하는 경우에도 식약청에서 검사를 대행해주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는 이 장비가 없어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광주시가 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식약청에 의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해 조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령 수산물 1000박스를 수입한다면 이 중 20박스를 골라 시료를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하는 식이다. 또 방사능 의심이 가능 식품이나 수산물에 대해서는 샘플의 수를 늘리고 있다.

이 때문에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한 식품 방사능 검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일선 지자체가 감마핵종분석기 등 전문 분석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한다.

◇예산과 인력 충원이 고민=현재 국내에서 감마선핵종분석기와 전문 분석 인력을 배치해 상시 수입식품 방사능 오염을 측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남도, 부산시 등이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자체들은 서둘러 식품 방사능 검사 체계를 갖춘 셈이다.

광주시는 휴대용 방사능 오염도 측정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 인력 1명이 월 2회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지에서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고, 월 100여건의 수산물을 조사하고 있다.

원산지 단속은 하는데… 광주시 북구청 경제정책과 직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10일 말바우시장에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는 관련 장비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식약청에 모든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경남도는 감마핵종분석기 2대를 갖추고 방사성 물질 검사 전문 인력 2명이 식품 검사를 하고 있으며 부산시도 이 분석기를 구입하고 전문 인력 1명을 배치했다.

국내 지자체 대부분이 감마핵종분석기 등을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예산 부담과 감마핵종분석기를 다룰 수 있는 RI면허(방사성동위원소취급 일반면허) 취득자를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국가에서 종합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는데 지자체가 따로 방사능 검사를 할 경우에 발생할 혼란도 일선 지자체가 식품 방사능 검사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해류 대순환에 따라 미국 쪽으로 이동했다가 5년이 지나면 다시 일본쪽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더욱 강화된 식품 방사능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이나영 분석팀장은 "광주·전남의 경우에는 영광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식품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간환경감시센터 감마핵종분석기 4대 보유

학교급식 관련 식품·물 등 지속적 모니터링

원전도시 영광은…

'방사능 공포'로 학교 급식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미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등이 급식에 쓰이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지만 광주시·전남도는 급식 관련 식품 방사능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올 상반기 유일하게 영광에서 초·중·고교에 납품되는 식품과 물 등을 분석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판명했다. 이 조사는 영광원전 주변의 방사능을 연구·감시하는 기관인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가 감마핵종분석기 4대를 보유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난 1999년 정부 지원으로 발족한 이 감시센터에는 5명의 관련 연구원이 영광 일대의 바닷물, 민물, 빗물, 공기, 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현재 식품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식약청의 경우 자체 업무 이외에도 여러 지자체의 검사 의뢰를 함께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급식 관련 검사는 할 수 없는 처지다.

따라서 지자체가 감마핵종분석기 등 전문 분석장비와 인력을 보유하면 학교 급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다.

한편 영광군은 수협과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합동으로 한빛원전 주변 지역과 수산물 직거래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방사능 오염도 파악을 위해 관내 유통되는 참조기와 일반 수산물에 대하여 현지에서 시료를 채취해 방사능을 분석하고 있다.

지난 9일 참조기를 비롯한 수산물의 시료를 채취해 방사능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인공감마 동위원소 등 일체의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정기호 영광군수는 "영광굴비의 원료인 참조기는 남중국해에서 발해만까지 우리나라 서해안에서만 회유하는 어종으로 일본 원전으로부터 안전하다"며 "정기적으로 방사능을 분석해 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는 등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광=조익상기자 ischo@

"한국과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불일치"

남윤인순 의원 분석 결과

인력늘려 안전관리 강화해야

일본이 실시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가 우리나라 식품안전당국의 검사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출 현황'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건수로 1만2500여 건으로 이중 우리나라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나 요오드가 검출된 사례는 131건이다.

하지만, 일본 현지의 수출 검역에서 검출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29건은 국내에서만 검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일본에서 10 Bq/kg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나오면 불검출로 처리해 국내 검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일본 정부에 불검출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한 이후 이 같은 문제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근처 13개 현 이외의 지역에서는 방사능 검사 없이 수출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내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131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7건이 일본 현지의 방사능 검사 없이 수출됐고 64건만이 검사를 했다고 증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남윤 의원은 "일본 측 방사능검사결과와 우리의 검사결과가 심각한 불일치를 보이는 것은 큰 문제"라며 "부산 감천항검사소의 검사 전담인력을 늘려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을 8개 현에서 16개 현으로 더 늘리는 방안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현 단위까지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